

한국경제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 세 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문제제기

1) 왜 경제학인가?

한국경제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¹⁾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곳에서 쓸데없이 지력(知力)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한국경제가 문제이지 한국경제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한국경제학을 문제로 삼는가?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한국경제보다 한국경제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국경제학을 문제 삼는 첫째 이유는 그 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많으나, 한국경제학에 대한 논의-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필자는 한국경제학이 올바른 길을 가야 한국경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어렵다면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한국경제학이 부실(不實)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국경제학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많은 경우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그 나라 경제학의 위기에서 온다. 경제를 보는 경제학자들의 관점의 혼미, 이론과 분석의 부실이 나라 경제를 위기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다. 특히 민생경제와 피부경기가 많이 나쁘다. 경기는 추락하고 실업은 늘고 있고, 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뢰할 만한 경제정책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정

* 본 원고는 2014년 2월 11일(화)~22(수)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첫날 제1전체 회의의 기조연설(퇴계인문관 3층 31308호)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여기서 '한국경제학'이란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경제학과 한국 대학과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구하였던, 모든 경제학적 연구생산물을 총칭한다.

부가 고심하여 경제정책을 몇 가지 발표하여도 과연 올바른 진단위에서 나온 정책인가? 과연 정책효과는 있을 것인가? 정책추진은 제대로 될 것인가? 등등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만이다.

오늘의 어려움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잘 될지 그 희망과 확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왜 안 보이는가? 이 나라 지도자와 학자들이 문제의 진단-이론상의 문제점과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올바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환언하면, 한국경제학이 한국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진정한 위기는 한국경제이전에 한국경제학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경제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등을 묻고 있는 것이다.

2) 경제학 발전의 3단계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경제학은-특히 후발주자의 경제학은-3가지 발전단계를 거치면 성숙한다-완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제학 발전의 3단계는 어떤 의미에선 그 나라의 경제학자의 학문적 성숙과 인간적 완성의 3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²⁾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자.

(1) 제1단계: [시장경제학]으로서의 경제학 혹은 [수입(輸入)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첫 단계는 유럽과 미국에서 발달해 온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 대한 학문, 즉 [시장경제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수입하는 단계이다. 즉 [수입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배하는 단계이다. 요즘은 서구경제학은 신고전파가 주류이기 때문에 서구의 신고전파경제학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수입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단계이다. 그 내용을 보면 미시분석으로 수요공급의 가격이론, 거시이론으로서는 케인즈주의적 국민소득결정론, 그리고 동태이론으로서는 비교우위론-무역과 경제발전-등등 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 1단계는 이 신고전파적 시장경제학을 수입하여 가르치고, 그 이론적 틀을 가지고 국민경제를 분석하고 경제발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려는 단계이다.

2) 경제학자의 일생도 그 학문의 성숙 정도에 따라 3단계를 지나며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와 30대는 시장경제학자로서의 연구 활동을 주로 한다. '수입학문으로서 경제학'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단계이다. 40-50대가 되면 도덕철학자(道德哲學者)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장뿐 아니라 법과 제도 정치와 행정 그리고 문화와 가치 등의 문제까지 안목이 넓어진다. 그러나 아직은 이론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60-70대가 되면 국가전략가(國家戰略家)로서, 경제안민가(經世安民家)로서의 경제학자로 변화 진보한다. 이제는 이론뿐 아니라 정책, 구체적으로는 정책환경 정책주체 등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정책집행과정,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도,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넓어진다. 이 정도가 되어야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 그리고 80-90대가 되면 이제 학문을 뛰어 넘어 성인(聖人)의 단계에 입문하는 것이 아닐까?

(2) 제2단계: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으로서의 경제학

제1단계의 ‘시장경제학의 단계’를 지나면 제2단계의 ‘도덕철학의 단계’로 넘어 간다. 아담 스미스가 가르쳤던 ‘도덕철학’은 ‘자유국가의 안정과 번영의 원리’를 찾는 노력이다. 본래 시장경제는 허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과 경제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와 행정 그리고 윤리와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번영원리’를 찾으려면 시장경제의 움직임을 법과 제도, 정치와 윤리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과 법과 제도, 경제와 정치와 윤리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번영원리가 나온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가 가르치던 도덕철학강좌에는 (1) 신학(natural theology) (2) 윤리학(moral sentiments) (3) 법학(jurisprudence) 그리고 (4)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이 4가지를 함께 가르쳤다. 그러면서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풍요의 원리를 밝히려 노력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왜 아담 스미스가 이 4가지를 다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³⁾ 우리나라 경제학이 앞으로는 국가번영의 원리와 후퇴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대한민국이 나가갈 번영의 길을 제시하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도덕철학적’이 되어야 한다-경제와 윤리, 법,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늘의 시장경제학은 학제적 연구-좀 더 정확하게는 초(超)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점차 도덕철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아니 현재의 경제학이 발전하면 자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3) 제3단계: [국가전략학(statecraft)][경세안민학(經世安民學)]으로서의 경제학

도덕철학이 ‘국가번영의 원리’를 찾는 노력이라면 찾아진 ‘국가번영원리를 실천하는 학문’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가전략학(국가경영학)’ 내지는 ‘경세안민학’이다. 경제학은 시장경제학에서 출발하여 도덕철학의 단계를 지난 최종적으로는 국가전략학 내지 국가경영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래야 소위 문자 그대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학(學)인 ‘참 경제학’이 될 수 있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하는 학문이 될 수 있다.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한 후에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의 실천-정책집행-을 통하여 그 당부가 입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안락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컨대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what to do-무엇을 할 것인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how to do-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학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전략학 내지 경세안민학이 되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천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3)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 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필자의 줄고(拙稿)가 있다. 박세일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의 내적 연관에 대한 통일적 파악을 위하여-” [아담 스미스 연구]. 조순 등 (민음사, 1989) 같은 논문이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개역판)] 박세일 민경국 공역 (비봉출판사, 2009) 부록에 실려 있다.

한다. 즉 이론의 부분인 science와 실천의 부분인 art가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를-즉 현실을-바꿀 수 있다. 사실 학문의 목표는 그리고 완성은 역사를-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데 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세계화시대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을 주장하는 것과 그 이론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노동법제와 관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현장적-이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권력관계, 노사정(勞使政) 사이의 힘의 관계와 그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유사한 노동개혁의 역사와 그 성패의 원인 등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개혁의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고 그 개혁과정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만으로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안민의 학이 되지 못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에까지 가는 개혁과정에 대한 구체적 road map이 나와야 '국가전략학으로서의 경제학' 즉 경제안민의 학이 된다. 환언하면 정책의 방향제시나 당위성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구체적 그림내지 전략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론적이면서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이 된다.

한 나라의 경제학발전의 일반적 단계가 위와 같다면, 한국경제학도 제 (1)단계에서 시장경제학 내지 수입경제학으로 출발하였지만 서서히 제 (2)단계로 진입하면서 한국적 시장이 한국적 법과 제도, 한국적 의식과 문화와 어떻게 상호관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적 시장의 특징'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밝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적 시장발전 내지 한국적 경제발전의 원인과 동인이 찾아 질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적 자본주의'의 특징과 발전원리가-이론적 차원에서-밝혀질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과거의 경제발전을 이론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미래의 길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는 제 (3)단계, 즉 '실천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정책의 역사, 한국적 정치와 관료제의 특징, 정책추진과정의 통치구조(governance),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치경제학-이익집단의 행태와 역사-등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 그러면 한국적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한국적 정책 환경과 한국적 정책주체들의 능력 등을 고려한 한국적 국가전략학/경제안민학으로서의 한국경제학이 완성하게 된다. 이제는 단순한 이론학문이 아니라 '이론-실천학문'으로서의 한국경제학이 성립하게 된다.

3) 한국경제학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학은 어디쯤 와 있는가?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경제학(university economics)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신고전파적(neoclassical) 시장경제학인 제 (1)단계의 수입경제학이 중심이다. 최근에 오면서 시장경제학과 다른 학문의 영역을 통섭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법 경제학(law and economics)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공동선

택이론(public choice) 그리고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 등이 들어와 일정 부분 시장경제학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대세는 시장경제학이고 수입경제학이다.

대학의 경제학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에서 하는 경제학에서는 제 (2)단계 경제학인 도덕철학으로서의 경제학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 당연히 한국적 시장을 둘러싼 한국적 법과 제도, 그리고 의식과 문화에 대한 학제적 분석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연구소에서의 연구를 보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보다는 좀 더 제도와 법, 그리고 관행과 의식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국가전략학-경제안민학으로서의 경제학인 제 (3)단계의 경제학은 크게 부족하고 요원한 편이다. 국가전략학이 되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가 함께 가야한다. 정책방향과 그 이론의 제시뿐 아니라 정책 환경과 정책주체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분석을 포함한 ‘정책의 실천전략’이 나와야 한다. 사실은 이것이 실학(實學)이다. 세상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요즈음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한국경제]는 ‘모방의 시대’를 끝내고 ‘창조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지 새 정부도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한국경제학]이 ‘모방의 시대’를 끝내고 ‘창조의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세상일에는 생각이 행동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知難行易)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학문이 먼저 모방의 시대를 끝내고 창조의 시대로 나가야지, 우리 경제가 모방의 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경제학이 아직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경제가 앞장서 창조의 단계로 나갈 수 있을까? 의심해 본다. 물론 역사를 보면 경제현실이 학자의 머리 보다 앞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큰 학문이고 큰 학자라면 항상 뒷북만 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과거를 연구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안목이 현실의 변화를 리드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한다. 필자의 주장은 결코 ‘수입경제학’을 폄하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발전에는 반드시 모방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모방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나라의 이론을 끝임 없이 배우고 모방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제는 배우고 모방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선진문화와 문물을 빨리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 모방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 진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도 한국의 경제학도 이제는 모두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학이 단순한 시장경제학을 넘어 도덕철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전략학으로 발전하려면 어떠한 자기반성과 자기점검 등이 필요할까? 한국경제학이 올바른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지력을 소모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려면, 우선 무엇부터 살펴보아야 할까? 무엇부터 반성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까? 필자는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금 한국경제학은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과연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문제설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한국경제의 문제, 한국경제학의 과제-시대적 국가적 과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만 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리가 굽한데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한국경제학은 이 시대적 과제를 풀기위하여 어떠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대대수의 경제학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소위 이론적 modelling 기초한 수리적 계량적 분석 방식이 과연 한국경제의 문제를 풀기 위한 올바른 연구방법인가? 그러한 연구방법론에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연구방법론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셋째: 한국경제학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올바른 연구 자세를-올바른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마음가짐을-가지고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염불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잣밥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잣밥에도 관심이 없고-이미 집에 잣밥이 많은 경우에는-혹시 놀러 다니는 데만 열심인가?

물론 올바른 문제설정은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이 시대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연구방법은 한국경제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안(이론)-나아가 실천전략(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학(空學)이 아니라 실학(實學)을 하는 방법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택은-과제와 방법론-은 사실 연구자 즉 경제학자의 학문하는 자세, 가치관과 인생관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연구하는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 이 3가지 문제-연구과제, 연구방법론, 연구자세-를 검토하면서 한국경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단순한 '시장경제학'의 단계를 넘어 '도덕철학'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전략학'으로 발전하는 길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한국경제학이 풀어야 할 과제는?-3대 과제

한국경제학이 풀어야 할 이 시대의 과제-한국경제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한국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물론 한국 경제는 지금 많은 단기적 경기 순환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기적 경기순환적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중장기 경제구조적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 한국경제학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다음의 3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즉 21세기 '세계화-선진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⁴⁾ 1960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근대화-산업화 시대의 발전패러다임]과는 질적으로 다른-그러면서도 발전적으로 연속되는-[세계화-선진화시대의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⁵⁾

둘째는 대한민국의 '세계화-선진화'를 위한 '국가개조(國家改造)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개조란 국가시스템 전체의 개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적어도 3가지 분야의 개조청사진(system reinventing blueprint)이 나와야 한다. 하나는 '산업화체제'-박정희체제-의 개조, 다른 하나는 '민주화체제'-1987년 체제-의 개조 그리고 마지막은 '인적자원개발체제' 즉 '교육노동체제'-1995년 5.31체제와 1996년의 노동개혁-의 개조이다. 앞의 두 개는 '행위 틀의 개조'라면 뒤의 하나는 '행위 주체의 개조'가 될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통일경제학]과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학]을 제시하는 일이다. 북한체제의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남북경제의 통합적 선진화를 담은 통일경제학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작동원리를 보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학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또한 통일의 시대에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다.

한국경제학이 당면한 이 3가지 과제 각각에 대하여 문제의식과 개략적 연구방향을 살펴보자. 앞으로 각각의 과제에 대하여 수많은 논문과 책이 폭포수 처럼 나오길 기대한다.

1) 과제 1: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제시

(1) '근대화-산업화'에서 '세계화-선진화 발전패러다임'으로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은 1963년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 하던 나라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으나, 1995년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불로 뛰어 올랐다.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된 셈

4) 여기서 세계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제 2차 세계화를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경을 넘는 자본 상품 정보 기술 인력 이동의 확대, 심화 그리고 격화를 의미한다. 유사한 세계화현상 1860년대부터 1914년까지도 있었다. 그 때를 제1차 세계화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선진화'시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 후 건국과 호국(40-50년대) 산업화(60-70년대) 민주화(80-90년대)시대를 지나 이제는 명실 공히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즉 선진국가가 되는 선진화가 국가목표가 되어야 하는 시대, 즉 2000년 이후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화-선진화시대'란 대외환경에서는 제2차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선진화를 -국가목표로- 달성해야 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5) 여기서 '근대화-산업화' 시대란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근대화 프로젝트-부국강병 국민주권, 자주독립(국가주권)-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문제의식도 노력도 있었으나-성공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다가, 이 근대화 프로젝트가 1960년대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근대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 1990년대 말 경에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근대화-산업화'시대라는 것은 근대화 중에서 산업화가 성공한 시기이기 때문에 1960-70년대로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다. 그것은 우리의 ‘산업화 발전패러다임’, 즉 ‘박정희패러다임’이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한국경제학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여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산업화패러다임-박정희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였는가?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러나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세상일에는 항상 양과 음이 있는데 우리 산업화패러다임의 단점은 없었던가? 산업화시대의 발전패러다임 중 21세기 선진화시대에도 우리가 유지하여 나가야 할 것은, 즉 산업화 패러다임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바꾸어야 할 산업화 패러다임의 ‘단점’은 무엇인가? 한국경제학은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 보다 정확하게는 ‘제 2차 세계화’가 급진전 되고 있는 시대이다. 산업화패러다임이 작동하던 근대화의 시대-근대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국제화(半세계화의 시대)가 아니다.⁶⁾ 그렇다면 근대화의 시대와 달리 세계화의 시대-1980년부터 본격화된 그리고 1990년 초 냉전이 끝나고 더 확대된-‘全世界화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환언하면 과거 근대화시대와 대비할 때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발전의 보편적 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보편적 국가발전원리’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근대화시대의-산업화패러다임의 ‘장점’과 결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그래서 세계화시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21세기 대한민국의 ‘세계화-선진화 패러다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경제학이라면 적어도 이상의 3가지 문제에 확실하게 답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시킨 발전패러다임의 주요한 장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한국의 선진화를 성공시킬 새로운 발전패러다임-과거 산업화시대의 장점에 새로운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를 결합시킨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한국경제학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성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새로운 길의 제시가 이 시대의 한국경제학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성공비결을 외국의 학자들은 관심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스스로의 연구가 부실하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하여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관이나 Mckensey 등 외국의 회사연구소들은 여러 가지 제안을-기본적으로 단편적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국경제학자-사이에 심층적으로 연

6) 엄밀히 이야기하면 ‘국제화’란 국민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 간 교류가 빈번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화’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국가 간 교류의 주체가 기업 대학 단체 NGO 개인 등등 다양 다기해 진다. 세계화의 역사를 보면 1980년부터 제2차 세계화-제 1차 세계화는 1860년-1914년까지 였다.-가 진행되는 데 세계화는 한동안 사실 반(半)세계화였다. 즉 동서냉전의 시대에는 자유진영에서만 세계화가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지구촌 시장경제로 편입되면서 소위 지구촌 전체가 세계화되는 전(全)세계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구된 종합된 대표의견이 없다면, 이 또한 참담한 일이다.⁷⁾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의 일단을 밝혀 보고자 한다. 두 가지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나는 근대화시대와 달라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단계를 넘어 선진화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산업화발전패러다임의 중에서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환언하면 선진화발전패러다임의 중요 내용은 무엇이어서 하는가? 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의 일단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필자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대단히 부족하고 불충분한 생각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학 속에서 한국적 발전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노력을 자극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한국경제학이 종합적으로 제시 못하면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필자는 근대화시대와 달라 세계화시대가 되어 몇 가지 ‘국가발전의 보편적 원리’가 달라졌다고 본다.

(1) 지금은 문명사적 대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정책에서도 기본적으로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대이다. 극심한 변화의 시대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에의 진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할 교과서가 없고 참조할 로드맵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창조적일 수밖에 그리고 자주적일 수밖에 없다.⁸⁾ 우선 그러한 사고의 창의성과 유연성이 필요하고, 과거의 고정관념과 도그마를 깰 필요가 많다고 생각한다.

(2) 우리는 반드시 세계화를 타고 가야 한다. 세계화에는 물론 양과 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가장 크게 이익을 본 나라의 하나이고 ‘세계화기질’이 강한 국민이다. 아니 지구촌의 인류는 크게 보면 세계화를 통하여 지난 200년간 크게 발전하고 번영하여 왔다. 문제는 세계화의 역동성을 최대한 타고 가되, 어떠한 세계화를 만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민주적 포용적 세계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너지와 자원의 한계, 증대하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국내외에 反세계화의 정서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3) 자유무역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옳다. 역시 무역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이것은 산업화의 시대이든 선진화의 시대이든 불변이다.⁹⁾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에 대하여는 제한적 지지

7) 일본의 학자들이 2차 대전 이후 ‘일본식 경영학’ ‘3種 神器論’ 등 자신들의 독특한 발전모델을 이론화하려는 노력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발전을 이론화하려는 북경대학의 Justin Yifu Lin 교수나 청화대학의 Yan Xuetong 교수의 노력이 돋보인다. 전자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후자는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의 입장에서 중국적 특질을 이론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경제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는 좋은 분석도 많고 이를 잘 모아 정리한 책들도 보이나 전체를 관통하는 ‘독창적 이론’ ‘자주적 주장’이 잘 안 보인다.

8) 여기서 ‘자주적’이란 자기의 역사 문화 정치 속에서 ‘장점’과 ‘비교우위’를 찾는 노력을 의미한다.

9)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대로 경제발전-일인당 국민소득의 향상 즉 노동생산성의 증가-은 분업의 세분화와

가 옳다. 특히 단기적 금융자본의 이동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한다. 자유무역도 물론 일부 비용과 고통이 발생하지만 크게 보아 엄청난 이익과 번영을 인류에게 주었다.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에는 적정한 신중 규제(prudential regulations)가 따르지 않으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 이 문제점은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역사적-경험적으로 밝혀졌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지금 이 구조적 위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크게 미흡하여 걱정이다.¹⁰⁾

(4) 세계화라고 하여도 세계적 자유방임이 아니다. 국경은 여전히 중요하다. 무조건 세계화가 아니다.¹¹⁾ 그래서 개혁개방의 노력과 더불어 다음의 두 가지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자국 내의 인적 물적 정신적 자본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먼저 하여야 한다. 세계화시대라 하여도 국내저축과 국내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외국 인투자 등 해외저축만을 우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산업화시대에는 국내저축자체가 너무 적어서 해외저축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선진화시대에는 국내저축과 국내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평과 안정 그리고 국민 성취감을 위하여 중요하다.

둘째는 세계화시대라 하여도 교역재 부문(tradable sector)만 우선하고 비교역재 부문(교육 의료 환경 안전 교통 음식 등 서비스부문과 영세중소기업 등 내수부문)의 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교역재 부문이 고용창출, 분배개선, 경제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산업화시대-에는 불균형성장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선진화시대에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옳다. 특히 21세기에 초(超)세계화(세계화의 폭과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되면서 국내저축과 국내자원의 보다 효율적 활용 그리고 세계화 부문과 비세계화부문간의 균형과 조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그래야 성장과 더불어 고용, 분배, 안정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5) 세계화시대라고 하여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뿐이다.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다음의 3가지가 아닐까?

첫째는 ‘법과 원칙’의 강화이다. 세계화 즉 자유와 개방은 반드시 법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자유=법치이다. 그래서 세계화시대일 수록 법치가 반듯해야 한다. 재산권제도와 계약법제가 확실해야 한다. 시장질서가 공정-자유경쟁적이어야 한다. 모든 법과 원칙은 정의(justice)의 범위 내에

특화에서 오고 분업의 세분화와 특화는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무역과 세계화는 시장의 크기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다.

10) 이대로 가면 제2의 제3의 세계금융위기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분명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1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세계화가 진행되어도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국가의 세계화는 없다. 국제기구 등이 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제한적이다. 21세기에도 국민국가는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화전력으로 자유(시장 자유)와 동시에 공동체(국가와 역사 등)를 중시하여야 한다.

서 가능하다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¹²⁾

둘째는 세계화시대에도 정부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를 창출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이어야 하고, 그 집행과정이 민관 협치형(民官 協治型)-정보공유, 상호협의, 분업과 협업-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의 관주도형의 picking the winner 스타일의 산업정책은 물론 안 된다.

셋째는 민주주의의 성공이다. ‘적정(適正)민주주의(optimal democracy)’의 달성이다. 여기서 적정민주주의란 사회적 구심력과 원심력 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과잉-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과도한 원심력-하거나, 정치지도자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지면 국가능력(state capacity), 즉 국가경영-관리능력이 크게 약화된다. 그러면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상시화(常時化)’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모두 후퇴한다.

(6) 세계화시대일 수록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 어느 시대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운 후 발전의 동력은 인적자본투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세계화시대는 국가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이 경쟁한다. 종합국력의 기반에 인적 물적 생산성과 생산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투자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교육개혁을 더 잘하나, 효율적 과학기술투자를 잘 하나,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세계화시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복지수준은 그의 ‘세계시장에의 공헌도(貢獻度)’-부가가치 창출공헌도-에 의존한다.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가가치 공헌도는 그의 보유하는 교육과 과학기술수준에 의존한다. 따라서 교육과 과학기술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복지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를 위한 교육기회와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는 소득수준 균형자(great income equalizer)이다. 교육과 과학기술투자는 성장의 길이면 형평과 복지의 길이이다.

(7) 세계화시대에는 특히 고용문제를 중시하여야 한다. 세계화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빠르고 비교우위구조의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빠르고 고용의 안전성, 임금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 산업화시대의 장기노동, 정규직중심의 고용구조, 그리고 연공서열의 임금구조가 파괴된다. 단기고용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능률급 내지 실적급이 증가하고 임금 간 격차-특히 숙련과 미숙련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고 안정된 고(高)임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사회전략이다.

12) 세계화시대가 되면 원격지교류가 많아짐으로 거래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정보화 기술이 거래비용을 많이 줄이겠지만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도 거래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규제완화 내지 탈규제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거래비용을 가능한 적게 만드는-즉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만일 정의(justice)와 거래비용(효율)이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은 효율극대화로 법제도를 고안하고 운영하되 ‘큰 정의’-정의의 본질적 가치-와 충돌 할 때는 ‘큰 정의’에게 비토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성장률 수준이면 어떻게 하여 고용기회를 최대한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 양질의 고용(고생산성-고임금)을 창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1) 고용친화적 산업정책과 (2) 노동시장 2중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극복, 그리고 (3) 교육개혁(평생교육 포함)-이 3가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8) 세계화시대에는 경제성장은 물론 소득분배,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균형 잡힌 정책시각이 요구된다. '성장위주 전략'만 가지고 근대화-산업화시대에는 성공이 가능하였지만, 세계화-선진화시대에는 성공하기 어렵다. 반면에 '분배위주 전략'만 가지고는 더더욱 성공할 수도 없다. 이제는 균화(均和)가 요구된다. 즉 균형과 조화이다. 결국은 복지의 문제는 '평생교육-평생고용(평생직장이 아님)-평생복지의 3각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성공하면 성장과 복지의 균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21세기에는 녹색성장은 이 모든 논의와 함께 가야 하는 시대이다.

(9) 세계화시대에는 대도시 지역군(Mega-City Region: MCR) 중심의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서 '분권형 국가경영' 체제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산업화시대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은 이제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세계화-선진화시대의 국가발전은 어느 나라든 대도시 지역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군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일 국내 소득분배-특히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가능하면 역동적인 대도시 지역군을 많이 여러 개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환언하면 '성장의 축'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성장의 축이 즉 대도시 지역군들이 각자의 세계화전략(going global)을 가져야 한다. 지역군 발전의 동력을 국내 못지않게, 세계에서-세계와의 연계 속에서-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군의 크기는 약 500만-1500만의 인구 규모가 적정할 것이다.

(10) 세계화-선진화시대에는 국내전략만 가지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다. 반드시 세계전략(global strategy)이 필요하다. 지구촌이 세계화될수록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국가도 과거보다는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어야 한다. 이제는 '전략의 시대'이다. 그래서 국가도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주지하듯이 세계화시대에는 국가발전이 자국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협력과 지역협력 그리고 이를 포함한 세계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만 아니라 기업도 개인도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발전전략과 세계전략의 청사진을 '매년' 제시하여야 한다.¹³⁾ 그래서 개별 경제주체-기업과 개인-들이

13) 국가가 매년 '세계전략 백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전체의 세계전략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개개인이나 개별기업 등-에게 권고하는 개별전략방향도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도와줄 범위를 확실히 하고 국민각자가 노력 할 분야와 범위도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국민을 위하여-해야 할 부분과 국민각자가 최선을 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각자의 세계전략을 결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이 필자가 생각하는 근대화-산업화시대와 비교할 때 달라져야 할 세계화-선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 내지 패러다임의 몇 가지 예시이다. 다음은 1960-70년대의 산업화패러다임과 비교하면서 2000년대 이후의 선진화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평소생각의 일단을 밝히도록 한다.

(1) 60-70년대의 산업화 패러다임은 노동집약적 수출지향 전략이었다. 수입개방에 소극적이었고 내수는 가능한 억제하고 수출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에 반하여 선진화 패러다임은 대외 뿐 아니라 대내개방도 함께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의 자유화와 '수입의 자유화'를 동시에 지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진화 패러다임은 내수시장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는 수출 못지않게 -아니 이제는 그 이상으로-'내수시장발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입자유화를 막는 내수시장발전이 아니라 수입자유화를 통한 내수시장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용창출과 분배개선은 물론 경제성장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화 패러다임은 정부가 주도하여-예컨대, 산업정책 등으로-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했다. 선진화 패러다임은 (a) 민관협치로 현장중시의 경제발전계획-산업정책 등-을 입안 추진해야 한다. 민과 관이 함께 현장에서 '발전의 장애물'을 찾아내고, 함께 풀어 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줄이도록 하면서 산업정책을 짜야 한다. (b) 기득권 구조를 경계하여야 한다. 산업화시대에는 불균형 성장정책이 기조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기득권내지 특권구조-예컨대 대기업집단, 공공부문 노조 등-가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약화시켜 왔다. 이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화 패러다임이다.

(3) 산업화 패러다임은 각종 시장개혁에 중점을 두어 시장규제를 풀고 가격기능을 살리는 개혁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여 왔다, 즉 "가격을 바로 세워라"(getting price right)가 중심전략이었다. 1960년대 이자율개혁과 환율개혁 등이 그 대표적 예이고 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선진화 패러다임에서는 가격개혁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제도 자체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라"(getting institutions right)이어야 한다. 이제는 금융질서, 재정제도, 교육제도, 노사관계, 공정거래질서, 사회보장제도 등등을 바로세우는 것-제도개혁을 하는 것-이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선진화 개혁에는 반(反)부패개혁, 정부 및 공공부문과 지방자치개혁, 그리고 정당 및 의회개혁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전체 시스템' 개조가 필수적이다.

(4) 산업화 패러다임은 정부가 주도하여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발전전략이었고 기본적으로 '선(先) 성장 후(後) 분배'의 모델이었다. 선진화 패러다임에서도 높은 투자수준을 유지하려는 '高투자형 경제(high investment economy)'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하다.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북한경제의 근대화와 산업화-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기 보다는 이제는 투자 친화적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높은 투자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보다 치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고투자형 경제를 유지하되 성장우선만이 아니라 분배와 환경 그리고 고용까지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투자를 통한 성장-고용-분배-환경의 고공병진이 가장 바람직하다.

(5) 산업화 패러다임은 포드(Ford)식 대량생산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한 획일적-주입식 암기식-교육과 훈련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이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이농하는 저임금 고학력 노동력에 의지하는 발전전략이었다. 그래서 근대화-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 주입식 교육을 받은 중등학교 졸업의 ‘반(半)숙련공’, 공교나 전문대 출신의 ‘반(半)기술공’, 등이 당시의 주 노동력이었다. 선진화 패러다임은 다양한 세계화-선진화교육에 기초한 세계화된 창조적 인력-다품종 소량생산의 인재-이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노동력의 확보도 국내외를 불문해야 한다. 그래서 [획일적인 대량생산방식의 교육-기능훈련의 강화-이농(離農)노동력 중시]에서 [세계화된 다양한 창의성교육-첨단 과학기술투자-국내외 인력교류 중시]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6) 산업화패러다임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시대였다. 경제발전계획도 집행도 모두 중앙정부가 추진했다. 지방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틈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선진화 패러다임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세계화-선진화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발 빠른 자기변화가 어렵다. 동시에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은 지방의 창의와 현장지식을 생산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만큼 국가발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방분권의 시대’를 넘어 ‘지방주권(地方主權)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데,¹⁴⁾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집권의 멍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분권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화 패러다임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7) 산업화 패러다임의 시대에 정부는 비(非)민주적(non-democratic) 정부였으나, 유효한 정부(effective government)였다. 당시는 정치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비민주적 정부였으나 경제적 자유에는 제한이 없었다. 거기에 외국의 비민주적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치권력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하였고 비교적 유능한 관료집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대화-산업화 당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능력 즉 국가능력(state capacity)-국가의사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 이었다. 그것이 경제발전성공의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선진화 패러다임시대는 더 이상 비민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민주정부이면 서도 유효한-유능한 정부를 만드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특히 후발개도국-를 보면 민주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민주정부가 무능정부가

14) 일본에서의 도주제(道州濟) 도입논의가 바로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의 예이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심하면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실패하여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경우-특히 남미(南美)에서-도 적지 않다. 그래서 선진화 패러다임에서는 반드시 이익집단민주주의(interest group democracy)와 포퓰리즘(populism)의 등장을 막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하면서도 국가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민주정부이면서도 반드시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

(8) 산업화의 시대이든 선진화의 시대이든 국가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이고, 둘째는 유능하고 깨끗한 관료집단이고, 셋째는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이 세 가지는 산업화 패러다임에도 선진화패러다임에도 모두 들어가야 하는 국가발전의 기본적 요소이다. 非민주주의시대였던 근대화-산업화시대에는 오히려 지도자의 비전 유지와 유능하고 깨끗한 관료집단의 유지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측면이 있었다. 또한 권력자에 대한 정치적 도전 이외 분야에서는 법치의 집행이 강력했다. 장기집권의 '강한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 되어 권력교체가 빈번하여지면서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유능하고 깨끗한 관료집단의 유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소위 이익집단의 '뺨법'이 많아지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입법'이 많아져, 민주화하면서 오히려 법치주의와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9) 산업화 패러다임의 시대, 국가발전의 활력은 국민과 정부의 합심, 즉 민관(民官)합심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한마음으로 민과 관 모두가 뭉쳤다 그것이 산업화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새마을 운동 등에서 나타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들이 모두 민관합심에서 나왔다. 선진화 패러다임 시대에도 여전히 정신적 자본은 중요하다. 어느 시대나 정신적 자본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¹⁵⁾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잘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자, 품격 있게 살아보자, 경제적으로 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살아 보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 자본 면에도 '근면 자조 협동' 등의 산업화 시대의 가치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새로이 '정직, 신뢰, 관용' 등의 선진적 정신자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0) 산업화시대 우리는 국제적으로 소극(消極)주의 내지 적응(適應)주의였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고 우리는 후진국이였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였고, 국제경제에서는 GATT 체제하의 자유무역의 세계흐름에 적응하기 바빴다. 이제는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고 한국도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어 선진국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는 자기의 독자적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적극(積極)주의 그리고 국제적 발신(發信)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국제

15) 정신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학자는 독일의 역사학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정신자본은 그 사회의 도덕, 윤리, 가치, 뿐 아니라 국민성, 민족적 열정,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정서, 사회적 분위기 등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현상 중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현상 전반을 지칭한다.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trust)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 보다는 훨씬 넓고 큰 개념이다.

정치에서나 국제경제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ism)를 만드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자기비전을 세우고 자기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진화 발전패러다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구촌의 일반국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적 근대화시대를 지나 21세기적 세계화시대로 들어가면서 국가발전의 보편원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60-70년대의 산업화시대와 80-90년대의 민주화시대를 지나 21세기 선진화시대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의 일단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위의 논의는 단순한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다.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분석을 촉구하기 위한 시론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학회’에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분석 그리고 논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 일반적으로 20세기 산업화시대와 달리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보편적 국가발전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2) 중진국까지 올라온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산업화 패러다임 중에서 앞으로 선진화를 위하여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 무엇이고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의 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묶어서 (3) 21세기 세계화-선진화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국민과 역사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한국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아니 한국경제학자들만이 가장 잘 풀 수 있는-국가적 연구과제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2)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를 향하여

그런데 우리 산업화의 성공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21세기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합쳐서, 세계화-선진화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찾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국가발전의 교과서, 즉 모범답안을 찾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종래의 모범답안이 그 신뢰성을 크게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발전-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은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1989년경부터 이론화된 워싱턴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기초하여,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IMF등의 국제기구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제시한 발전전략이었다. 그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게도 권장하는 표준모델로 발전되고, 확산되어 왔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1) 거시경제의 안정(stabilization) (2)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즉 경제의 자유화(liberalization) (3) 공기업의 민영화 즉 사유화(privatization) 라는 3가지 주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 과도한 ‘시장만능주의’(market fundamentalism)

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맹목적적 신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 선진국의 성공경험을 일반화하여 만든 정책기준을 무조건 모든 개도국에 ‘일률적’으로-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강요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다. (1)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못지않게 [경제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이 빨라지면서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성장률] 자체 보다 [고용창출력]-고용률-이 더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또한 (2)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세계화 부문(globalizing sector)과 비(非)세계화부문(non-globalizing sector)간의 이중구조(二重構造)가 심화되면서 소득과 생산성의 격차가 구조화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¹⁶⁾ (3) ‘경제의 세계화’와 동시에 ‘정치의 민주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면서 각종의 국가과제-성장, 안정, 분배, 환경-를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가 국가발전의 중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안적(alternative)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조세프 스티글리츠(J. Stiglitz) 폴 크루구먼(P. Krugman) 제프리 삭스(J. Sachs), 덴 로드릭(D. Rodrik) 등의 이른바 진보적 학자들-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모여 대안적 발전패러다임의 제시를 시도한바 있다.¹⁷⁾ 그러나 그들도 (1) 역사와 문화와 제도의 중요성의 강조 (2) 시장과 정부역할의 균형 (3) 소득분배와 환경에 대한 관심 (4) 단기국제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대안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주장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또 하나의 움직임으로는 중국의 발전경험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쿠퍼 라모(J. Cooper Ramo)가 주장한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있다.¹⁸⁾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혁신의 강조와 실험주의(experimentation), 즉 단일해법보다는 실험적 해결방식의 선호 (2) 지속가능성과 형평(equity)을 중시하는 성장전략 (3) 이념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라는 대단히 애매하고 추상적 주장에 그쳤다. 뿐 만 아니라 이 베이징 컨센서스는

16) 일반적으로 세계화부문이 비(非)세계화부문보다 성장이 빠르다. 그 이유는 세계화부문은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는 나라,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어 그 나라 지역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세계화부문은 내수시장의 성장률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이극화(二極化) 내지 양극화를 수반하는 경향을 가진다. 사실이 이렇다면 단순한 경기회복-단순한 성장전략-은 양극화의 해소를 가져오기 어렵다. 성장전략과 더불어 별도의 구조개혁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17) Narcis Serra and Joseph E. Stiglize, *The Washington Consensus Reconsidered: Toward New Global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8) Joshua Cooper Ramos,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일당(一黨)지배의 국가주의적 발전모델이기 때문에, 선거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많은 개도국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이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soft power가 크게 부족함을 의식하고,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발전모델을 이론화하고 일반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확산하려는 무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상하이 푸단 대학에 [중국발전모델연구중심]이라는 연구소를 개소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경험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서 ‘독창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 중국모델을 만들어-보편화하여-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는 의도이다.

여하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뢰추락을 배경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어떠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에 의지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구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과서가 없어졌기에 모델이 없어졌기에 세계는 분명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필자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완전히 대체할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든 보완하든 지금 ‘믿을 만한 대안’이 없는 것은, ‘발전전략의 교과서’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빈 공간’을 메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학자들이 21세기 국가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서,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를 만들어 지구촌에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학자가 이 일을 하는 데 최고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한 나라이고, 곧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성공한 나라이지만,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1997년 소위 IMF 위기)를 모두 다 경험했고, 세계화의 성공 뿐 아니라 어려움도 극복한 나라이다. 더 나아가 ‘산업화’ 뿐 만 아니라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 민주화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안고 고민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발전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교훈을 기초로 하고- 21세기 초(超)세계화로 인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까지를 감안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제시한다면, 이는 많은 개도국에 큰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정책의 역사에 기념비적 공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 크나 큰 국가적 자긍과 국민적 자부심이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컨센서스를 만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여름부터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분야별로 4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아래와 같은 10가지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서울컨센서스(안)을 놓고 1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면서 아래의 서울컨센서스(안)를 보다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서울 컨센서스: 21세기 신 발전패러다임 I. II 권 (나남, 2011)]으로 나왔다. 참고로 당시 논의되었던 서울 컨센서스(안)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자본(mental capital)을 중시하여야 한다. 지도자의 비전, 열정,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 근면, 성실, 자조, 그리고 정직, 신뢰, 관용 등의 정신자본이 경제성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2) 지구촌과의 통합(global integration)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큰 흐름을 반드시 타고 가야 한다. 따라서 양자 간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은 다다익선이다.

(3) 세계화부문과 비(非)세계화부문을 병진하여 발전시키고, 이 양자 간의 이중구조(二重構造), 특히 생산성과 소득의 이중구조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적 포용적 세계화가 가능하다.

(4) 교육과학투자의 확대와 투자효율을 높이고 세계의 최고의 ‘지식생산-생태계(生態界)’-세계적 주요대학과 핵심 연구소 등-와 깊이 연계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투자가 선도하는 공생(共生)적 발전-성장-분배-환경의 조화-을 도모하여야 한다. 성장 7기타 3의 비중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성장 중시는 유지해야 한다.

(6) 경제발전의 목표를 ‘성장극대화’가 아니라 ‘고용극대화’에 두어야 한다. 고용친화적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기술정책, 복지정책 을 추진하여야 한다.

(7) 국가경영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더 나아가 ‘지방주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관협치(民官協治)’로 바꾸고 나가야 한다.

(8) 이익집단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적정민주주의(optimal democracy)를 세우기 위한 정치개혁-헌법 개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능력(state capacity)-합리적 정책수립 및 추진능력-을 높여야 한다. 민주적이면서도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9)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남북경제의 시너지를 통하여 한반도 전체를 ‘선진통일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통일 후 만주-연해주-극동 등을 포함한 신통북아시아 시대를 열어 세계중심국가-세계모범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가 1000년의 ‘변방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10) 현장(現場)주의, 역사(歷史)주의, 제도(制度)주의를 소중히 하는 [국가전략]과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 서울 컨센서스(안)은 전혀 완성된 것도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아직도 진화와 심화과정에 있고 미완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다 치열한 토론과 비판 그리고 냉정한 분석과 논리싸움이 필요하다. 이제는 모든 한국경제학자들이 각각의 전공분야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경제학회가 그러한 노력을 조직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뛰어 오르는 길을 제시하고 동시에 위성

턴 컨센서스 이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후진국과 중진국들에게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한국경제학도 수신(受信)-수입경제학-만 하는 ‘모방의 시대’가 아니라 발신(發信)-수출경제학-을 하는 ‘창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경제가 선진국경제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고구려 멸망이후 1200-1300년간의 세계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동아시아에 우뚝 선 ‘세계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제2: [세계화-선진화] 國家改造 청사진 제시

근대화-산업화시대를 이끌어 온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중진국 국가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세계화-선진화시대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선진국형 국가시스템’으로 현재의 ‘중진국형 국가시스템’의 대대적 개조가 필요하다.¹⁹⁾

그러면 무엇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업화체제’-박정희 체제-를 경제적 선진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화체제’-소위 1987년 체제-를 정치적 선진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법-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그러나 세계화-선진화를 이루려면 법-제도라는 국가 틀을 [선진제도]로 바꿈과 동시에 반드시 그 틀 속에서 활동하는 주체인 국민을 [선진국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노동개혁이 중요해 진다. 따라서 셋째는 ‘교육-노동체제’-1995년 5.31교육개혁 1996년 노동개혁-를 선진적 교육-노동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상의 3분야에서 중진국 국가시스템을 선진국 국가시스템으로 바꾸는 개조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은 세계화시대의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가지 분야에 각각에 대한 국가개조 청사진을 연구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경제학이 당면한 21세기 초의 시대적 과제이고 역사적 사명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문은 현실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 3분야의 국가개조과제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1) 산업화체제-박정희체제-의 개조

1963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산업화체제는 그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여 왔다. 지금도 1963년 체제가 당시처럼 과거의 원형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산업화체제의 법과 제도, 관행과 사고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에는 산업화체제의 순(順)기능이 훨씬 많아, 우리가 압축고도성장에

19) 필자가 여기서 개조(改造: re-invention, re-creation)라는 용어를 쓴 것은 단순한 형식적 부분적 표피적 개혁(reform)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 심층적 전체적 개혁과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 흰 종이 위에다 ‘제도의 그림’을 새롭게 다시 그리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화하려면 불가피 역사와 현장을 중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정책추진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고 수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그러나 목표하는 그림 자체는 철저히 개혁적-보다 근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선진화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산업화 체제는 순기능보다 역(逆)기능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의 산업화 체제를 대대적으로 환골 탈퇴시켜야 한다.

크게 바꾸어야 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과거 산업화시대 금융정책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래서 관치금융 내지 지시(指示)금융의 관행 속에서, 금융인재교육도 금융관행의 선진화도 대단히 늦어져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세계경쟁력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2) 과거 산업화시대 압축고도성장을 위해 독과점대기업의 등장을 허용하고 때로는 조장하여 왔다. 그래서 시장질서가 대단히 비(非)경쟁적이 되었다. 이제는 독과점대기업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효율과 공정 모두에 큰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의 허구화 할 수도 있다. 어떻게 자유공정경쟁을 위한 시장질서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재창조할 것인가?

(3)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지배하였다. 돈과 권력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독자적 발전전략을 짤 수도 집행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늘어왔다. 세계화-선진화 시대는 대도시와 지방이 앞장서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시대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중앙집권은 물론 지방분권까지도 넘어서서 역동적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 것인가?

(4)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부스스로가 사업주체가 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각종 공기업과 반관반민(半官半民)사업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들이 그 동안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몸집을 키워 왔고 공공연히 철 밥통의 기득권집단이 되어왔다. 필요한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여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들 집단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합리화 할 것인가?

(5)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동조합들이 특권세력화-일부는 노동귀족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할 뿐 아니라,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결국 성장을 막고, 분배개선과 고용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이중구조를 깨는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후발주자로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어 추격형(catch-up)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훈련체제도 당연히 선진문물을 빠른 시간 안에 배우는, 암기위주의 획일적 대량생산체제였다. 이제 교육시장도 창조성중시의 소량 다품종 시장, 양질의 품격시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교육관련 각종이익집단들이 -교사단체, 교과서단체 등-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반(反)세계화 반(反)선진화를 이념으로 하는 일부 교사단체와 교육운동단체들을 이대로 두고, 세계화-선진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과연 해 낼 수 있는가?

(7) 과거 근대화-산업화시대에는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높았고 인구도 젊었다. 그러나 이제 세

계화-선진화시대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위 우리나라의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생산연령인구가 피부양인구보다 빨리 증가하는-기간(2013년 경까지)은 이미 끝난 것 같다. 이제 인구 오너스(onus)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재정, 복지, 노동, 보건, 등 전반의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여야 한다. 어떻게 이 큰 일을 해 낼 것인가?

이상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 중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지적하여 보았다. 이러한 산업화시대의 유산-구조적 유산-에 대하여 개혁의 메스를 가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세계화-선진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학은 이들 산업화체제의 부정적 구조적 유산을 철저히 분석하여-긍정적 유산을 해하지 않으면서도-근본적으로 산업화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2) 민주화체제-1987년 체제-의 개조

대한민국은 1960년대-70년대의 산업화의 성공을 배경으로 1980년대-90년대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에 들어간다. 그 결정적 계기가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투쟁의 승리였다.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사회의 각 부분이 민주화 되어 왔다. 물론 정보화의 확산도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1980-90년대 성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1987년 체제-가 21세기 세계화-선진화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두 가지 큰 도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의 도전은 ‘과잉민주화’-중우(衆愚)정치-의 문제이다. 물론 우리사회에는 아직 민주화가 부족한 분야도 있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비정규직보호 등과 같이 과소민주화의 분야가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과잉민주화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과잉민주화의 문제란 무엇인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국가경영능력 즉 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하락한다. 결국은 무능한 국가가 된다.

민주화란 본래가 ‘권력의 하방이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권력의 하방이동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의 구심력이 너무 약해지고 원심력이 과도하게 강해진다. 그러면 지역집단 직종집단 등 각종의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목소리는 작아진다. 소위 ‘이익집단 민주주의’(interest group democracy)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회는 더욱 분열, 갈등하게 된다. 여기에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과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인기영합주의 즉 입법 및 행정 포퓰리즘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국 법치주의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법위에 헛법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주요한 국가정책결정-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아니 설사 하여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치와 원칙은 약화되고 국가능력은 추락한다. 그 결과는 소위 국정기강의 상실, 국정외 표류, 더 나아가서는 경

제후퇴,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패까지 간다. 20세기 후반부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분명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내지 실패할 것이다. 바로 이 이익집단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을 막아내지 못해서 일어날 것이다.

둘째의 도전은 북한의 '전체주의'의 도전이다. 소위 '종북(從北)주의의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었고,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도 종북주의의 도전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을 격리시키는 정치적 탄압이 심하여 국정운영이나 국가경영에는 별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를 지내면서 종북주의가 사회에 각 곳에 자유로이 침투 확대되어 왔다. 이제는 국회 내까지 들어와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반(反)국가 의 집단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건강하려면 비판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한다. 물론 종북주의자들의 비판의 내용 중에는 일부 건설적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파괴적 체제부정적 비판이다. 목표가 반(反)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인 젊은 청년들에게 극좌이념으로 편향된 역사교육-자기부정과 자기학대의 소위 '수정주의적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어느 나라이든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애국심'에서 오고 애국심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본 '서울 컨센서스'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신자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북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반(反)산업화 반(反)민주화 세력이다. 그래서 정부의 일체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결국은 정권의 실패를 넘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의 실패를 목표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도전 앞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우리는 민주화체제-소위 1987년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면 1987년 체제의 주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

민주화체제 즉 1987년 체제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단임 5년 대통령 체제이다. (2) 거대 양당제이다. 지역할거주의가 강한 정치풍토 속에서의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거대 양당제가 유지, 강화되고 있다. (3) 승자독식(勝者獨食)과 양극화의 정치이다. 양당 중 승리하는 정당이 국가권력을 완전히 독식한다. 그래서 정치와 권력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4) 모든 정당이 이익정당이고 정치지도자 개인에 의존하는 사당(私黨)이다. 확고한 이념과 세계관을 가진 정당이 아니고, 시스템정당인 공당(公黨)도 아니다. (5) 그 결과 국가전략이나 국가정책을 쉽게 경시하는 정치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익집단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탓에 빠지기 쉽고, 종북주의의 도전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체제, 1987년 체제는 군사독재의 지속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세계화-선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정치시스템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우선 단임 5년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국가목표를 소홀

히 할 위험이 크다. 5년 내에 성과를 내는 국정과제에 치중하게 된다. (2)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양당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선진화시대가 되면서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담아내기 어렵다.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다당제(多黨制)의 등장이 제도적으로 어렵다.

또한 (3)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선거가 생사를 건 전승(全勝) 혹은 전무(全無)의 싸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후 진 쪽이 결코 승복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도 생사를 건 싸움은 지속되고 관행화한다. 그리고 (4) 주장은 보수와 진보 혹은 좌와 우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가치적 정체성이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체는 '가치정당'이 아니라 '이익정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연합은 정책을 타협하는 '정책연합'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어 갖는 '이익야합'이 된다. 그래서 국가발전이나 국민복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5) 정당이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지도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당적 내지 봉당적(朋黨的)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당(公黨)으로서 당원을 모으고 교육하고 조직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을 길러내고 국가비전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기능은 아주 미미하다.

정치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이 과연 21세기 세계화시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그리고 세계화-선진화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각각의 부문별로 올바르게 제시한다고 하여도, 지금의 정치-한국 민주화의 수준과 구조-를 저대로 두고, 과연 그 연구결과들이 우리사회에서 실천되고 국민민복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경제학은 어떤 식이든 답을 해야 한다.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경제학은 민주화체제-1987년체제-를 극복하는 방법과 한 단계 높은 민주화의 목표를 연구하여 '민주화체제의 개조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떤 분은 그 문제는 정치학자의 몫이 아닌가?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특정여건(constraint) 아래서 특정목표(object)를 극대화하는 인간의 행위를 이론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틀과 수단'으로서는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스템의 개조에 기여하여야 한다. 정치학자나 법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과잉민주주의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1987년 체제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한국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환언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適正민주주의(optimal democracy)-민주주의의 원심력(대중 민주주의)과 구심력(엘리트 민주주의)을 균화(均化)할 수 있는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경제학자 법학자 정치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과제라고 생각한다.²⁰⁾

(3) 교육노동체제-5.31 교육개혁, 1996 노동개혁-의 개조

세계화-선진화 개혁은 기본적으로 (1) 제도개조와 (2) 인간혁명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제도개조는 앞에서 본 산업화체제개조 그리고 민주화체제개조로 나누어진다. 한마디로 제도개조는 [선진제도]로의 개혁을 의미하고, 인간혁명이란 [선진국민]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화-선진화시대의 국민개개인의 소득-삶의 질의 핵심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세계시장에 얼마나 양질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지구촌에 보다 많은 양질의 부가가치(high quality value added)를 제공하는 인재를 많이 가진 나라는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는 후진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금 세계는 교육개혁 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좀 더 좋은 교육제도를 창조하여, 지구촌에 보다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교육해 내는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경쟁력의 기초이고 국민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화-선진화시대에 교육개혁을 통하여 [선진국민]을 만들려고 모든 국가가 나서서 무한경쟁을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민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1) 우선 ‘세계화능력’이 높아야 한다. 즉 외국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관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진화능력’이 높아야 한다. 즉 첨단 과학기술과 선진적 경제경영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첨단 지식 정보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3) ‘창조능력’이 높아야 한다. 이제는 모방만으로는 새로운 가치창조가 어려워지는 시대이다. 창조성과 유연성과 적극성이 중요해 지는 시대이다 (4) ‘협치능력’이 높아야 한다. 이제는 개인영웅의 시대라기보다 남과 얼마나 잘 관계하고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를 통하여, 보다 양질의 새로운 부가가치창조가 가능해지는 시대이다. 마지막으로 (5) ‘공동체능력’이 높아야 한다.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 연대, 책임을 소중히 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마음가짐-가치관과 역사인식-과 능력을 가진 개인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발전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차세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이 있었다. ‘누구나 어디서나 세계최고의 양질의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개혁원칙을 세웠다. (1)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제공 (2)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를 중시하고, 교육공급자-교사와 학교-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교

20) 어느 나라든 선진민주주의에는 ‘대중 민주주의(mass democracy)’와 ‘엘리트 민주주의(elite democracy)’적 요소가 함께 있고 이 두가지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하원은 대중 민주주의적 제도라면 상원은 엘리트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선출직인 대통령이 대중 민주주의적 제도라면 비선출직인 법원과 직업공무원제 등은 엘리트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본래 대중 민주주의가 과도하면 중우정치, 민중주의, 혼란과 무질서, 비효율과 불공정 등의 부작용이 나오기 쉽고, 반면에 엘리트 민주주의가 과도하면 권위주의, 귀족주의, 독재주의, 기본적 인권의 무시 등의 부작용이 나오기 쉽다. 그래서 선진적 민주주의란 사실 ‘무정부’상태와 ‘독재주의’ 사이의 합리적인 중간지점의 올바른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육 (3)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정부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교육 (4)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교육 -초중등에는 평형성, 대학에는 수월성강조 (5)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 (6) 평생교육체제(life-long education)의 구축 등등이다. 5.31교육개혁 이후 이미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개혁추진의 성과도 있었고 후퇴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새로운 문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도전을 맞고 있다.

첫째는 교육목표내지 철학의 혼미이다. 우리사회 일각에 발전과 경쟁을 거부하는 교육정서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사회에 세계화-선진화시대에 걸맞은 교육비전과 목표-즉 어떤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전략-어떻게 할 것인가?-도 확실하지 않다. 교육목표와 전략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둘째는 전반적인 공(公)교육의 악화 내지 표류현상이다. 공교육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사(私)교육이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을 해한다. 소득분배를 악화 시킨다. 외국에서는 교육이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성장에는 기여하나 형평에는 오히려 유해한 것 같다.

셋째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전교조의 역기능이다. 반(反)개혁이고 반(反)진보이다.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 간 경쟁과 교사간 내지 학교 간 경쟁을 거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로 간다. 그러면 세계화-선진화 시대가 요구하는 지구촌에서 경쟁할 수 있는-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인재를 못 키워 낸다.

넷째는 정부와 학교의 '교육개혁능력'에 대한 불신내지 냉소이다. 우리 정부와 우리학교가 -교육공무원과 교사 등-과연 교육개혁을 해 낼 수 있을까? 기득권에 안주하고 온갖 특권과 깊게 연계되어 있는데, 과연 교육계가 자기혁신을 해 낼 수 있을까? 교육계의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일 수록 사실은 비관론이 많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의 5.31교육개혁의 성과와 실패를 돌아보면서 새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계의 몇 가지 근본문제-위의 4가지 문제-에 대한 새롭고 확실한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2의 5.31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1996년 대대적인 노동관계법 개혁이 있었다. 당시는 5가지 노사개혁의 원칙이 있었다. (1) 공동선(共同善)의 극대화: 즉 모든 작업장을 노사가 합심하여 '생산과 복지 공동체'로 만들자 (2) 참여와 협력: 즉 기업은 '열린 경영'을 하고 노조는 '생산적 노동운동'을 하자 (3) 자율과 책임: 노사 모두가 사회적 책임-국민경제발전에 대한 배려-을 생각하는 '노사자치(勞使自治)주의'를 구현하자. (4)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노동자에 대한 인적투자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자 (5)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제도와 의식을 모두 세계최고의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한다. 소위 세계표준(global standards)에 맞추자.

이러한 원칙하에 진행 온 노동개혁을 한지도 이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

의 변화의 성과와 실패를 돌아보아야 한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크게 보아 4가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등 불완전 고용의 양적 확대이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2) 노동이동의 상시화(常時化)이다. 즉 대단히 활발한 노동이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의 등장이다. 더 이상 생애직장은 없다. 졸업 후에도 효과적인 평생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3) 거대노조-특히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부문의 거대노조-의 특권집단화 내지 귀족화경향이다. 그리고 (4) 노사관계의 정치화내지 정파화(政派化)이다. 일부 노동운동이 정치투쟁 내지 이념투쟁수단으로서 변화해 왔다. 아니 이용당해 왔다. 이 4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포함하여 21세기 세계화-선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상해야 한다. '21세기 신 노사개혁'로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학이 특히 노동경제학이 앞장서서 교육학, 교육행정학 그리고 노동법학, 노동정치학, 인사관리학, 노사관계학 등과 합동으로 노력하여 21세기 '신 교육개혁안'과 '신 노사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4) 국가개조철학 혹은 원리-공동체자유주의

세계화-선진화를 위한 각종의 -산업화체제나 민주화체제를 개조하기 위한 혹은 교육과 노동체제를 개조하기 위한-국가개조를 추진할 때 개혁철학(reform philosophy) 혹은 개혁원리(reform principle)로는 어떠한 철학과 원리를 활용하면 좋을까? 각종 법과 제도를 개혁할 때 어떠한 철학 위에서 구상하고 어떠한 원리내지 기준을 사용하여 세계화-선진화 시대에 맞는 국가개조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필자는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에서 찾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 공동체적 가치, 연대, 책임을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인 '공동체자유주의'가 국가개조철학내지 개혁원리가 되어야 하고, 개별 제도개혁구상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주의가 '기본원리'이고 공동체주의는 '보완원리'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발전과 인간행복의 원리가 개개인의 창의와 자유에서 온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려면 그리고 지속가능하려면 반드시 사회구성원 각자가 공동체적 가치를 '자발적으로'-외적 강제가 아니라-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가 이기적 자유로만 질주하여-자유만능주의(freedom fundamentalism)가 되어-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훼손하는 자유가 될 위험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공공선(共同善)을 창출하지도 않게 된다.²¹⁾

21)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하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것은 형용모순(形容矛盾)이 아닌가? 개인을 소중히 하는 가치인 자유주의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가치인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을 한다. 이것은 오해이고 이러한 오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유래한다.

첫째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 내지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집단이나 전체의 가치를 앞세워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고 이와 대립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하

따라서 모든 국가개조를 위한 개혁안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우선 그 개혁안이 ‘자유주의의 원리’에 맞는가? 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 개혁안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선택의 폭을 확장하는가? 이를 점검하여 우선 ‘그렇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개혁안이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가? ‘공동체적 가치’를 제고하는가?를 점검하여 보아야 한다. 이 점검에서도 ‘그렇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개혁안은 세계화-선진화시대 올바른-대단히 바람직한- 국가개조의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유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공동체주의를 보완원리로 하는 것은 좋으나, 양 가치간의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작은 충돌’의 경우에는 자유주의를 우선하는 것이 옳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체주의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나 ‘큰 충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상대방에게 비토권을 주는 것이 옳다. 예컨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개혁인데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심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 개혁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대로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혁인데 자유주의의 가치를 ‘심하게’ 해하는 경우에도 개혁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요약하면 ‘작은 충돌’의 경우에는 자유주의를 우선하나 ‘큰 충돌’의 경우에는 양자를 조화하는 안을 다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 개혁안을 구상하는데서 작은 충돌은 많아도 큰 충돌의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동체자유주의의 개혁철학 내지 원리로서의 구체적 적용을 교육개혁의 경우를 통하여 생각해 보자. ‘선진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우선 자유주의원리에 기초한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체화 해 보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서비스-어느 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까?-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능한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어떠한 교육내용을 어떠한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지 않는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기본가치로 하되 공동체의 건강성도 함께 고려하자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여-이기적 소아적 자유주의가 과도하면-공동체가 피폐해지고 그러면 자유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소중함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 강조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대화와 설득과 교육이다. 개개인의 이성과 양식에 호소한다. 계급주의 정당은 집단주의의 대표적 예이고 가족공동체는 공동체주의의 대표적 예이다.

둘째는 정치이론과 철학이론을 구별하지 않는 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즉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서구사상의 전통에서 보면 ‘철학적 자유주의’와 ‘철학적 공동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상호 대립한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는 상호모순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다. 1980년과 90년대 서구 철학계에서의 큰 논쟁의 하나였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와의 논쟁은 사실 철학적 자유주의와 철학적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이었다. 즉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예컨대 인간을 비(非)연고적 원자화된 개체(unencumbered and atomistic self)로 보는가? 형성적 관계적 자아(constituted and situated self)로 보는가? 등-을 다루는 철학적 논쟁이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공동체자유주의는 철학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사상으로서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이고, 따라서 이 양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소중히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대사회가 극단적 이기적 자유로 인하여 각종의 공동체의 피해, 공동선의 파괴 등,-가정파괴 학교붕괴 범죄증가 계급갈등, 인간소외, 환경파괴 등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 문제를 광정하기 위하여 정치적 공동체주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유가 공익 내지 공동선의 제고-즉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공정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성과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교육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최대의 자유-공정경쟁의 자유-를 주되, 그 교육성과를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사회 전교조의 일부가 학생평가와 교사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자유를 보장하되 평가와 책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유는 창의를 낳지 않고 방종과 안일로 빠져 결국은 공익을 해하고 퇴보의 원인이 된다.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러한 교육성과를 내는 전 교육과정이 반드시 공정하고 자유스런 경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성실 근면 정직의 덕이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최고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세계최고의 학생, 교사, 학교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방향으로 교육개혁의 철학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교육개혁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공동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개체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개인의 발전도 행복도 공동체와의 관계를 떠나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그리고 ‘자연공동체’를 떠나 인간의 발전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관 국가관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와 국가를 외면하고 적대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교육은 안 된다. 아무리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여도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는 교육은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공동체교육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이외에도 자유주의에만 맡기면 소홀해질 우려가 큰 문사철(文史哲) 교육분야, 그리고 이공계에서의 기초연구분야 등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부가 당연히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교육을 받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는 지역과 부모의 소득수준 때문에 교육기회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기회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기본적 사명이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예로 들어 공동체자유주의가 개혁의 올바른 철학과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사실 다른 구조개혁-예컨대 금융개혁 공기업개혁, 노동개혁, 지방발전개혁, 복지구조개혁, 등등-의 경우에도 ‘공동체자유주의’는 쉽게 개혁의 철학과 원리 내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면관계 상 더 이상의 예는 생략한다.²²⁾

22) 공동체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경제, 정치, 교육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에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 박세일 나성린 신도철 공편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개정판) 나남, 2009.

3) 통일경제학과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학 제시

한반도에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경제학은 이 국가적 역사적 과제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통일이 과연 대박인지 부담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다가오는 통일을 국가도약의 역사로 만들려면 그리고 민족비상의 역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통일의 시작을 맞아야 하고 그 통일과정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통일완성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한국경제학은 답해야 한다.

(1) 통일경제학이 나와야 한다

통일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합의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흡수통일’이다. 전자는 북한의 현 지도부가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하는 경우 혹은 북한에 개혁개방세력이 등장하여 북한을 장악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면 합의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통일의 길이 열리면 1992년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길을 가며 된다. 대단히 바람직한 길이고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하나의 길인 흡수통일의 경우이다. 이는 북한에 급변사태(예컨대, 암살 쿠데타 민중봉기 등 혹은 이들의 결합)가 일어나 현 집권세력이 붕괴하는 경우이다. 현 집권세력이 붕괴한 후 새로운 집권세력이 안정적으로 등장하지 못하면 흡수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 경우에도 만일 남한이 통일의지가 약하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주저하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통일 당할 것이다. 즉 ‘북한의 중국화’ 즉 북한의 중국변방속국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최근에 오면서 남북한 간의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있는 반면, 남한주도 혹은 중국주도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반드시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합의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남과 북의 통일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실천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필수적인 이론적 준비의 하나가 바로 통일경제학이다.

사실 어려운 것은 흡수통일의 경우이다. 이 경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남과 북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약 10년 정도는 1국2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남북이동을 제한적으로 하고 북한을 남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북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자생적 경제발전, 그리고 남북한경제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단관리를 전제로 통일경제학은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가 주요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²³⁾

(1) 우선 [긴급재난대책]이 나와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발생하는 인도적 재난상황에 대

23)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2014: 21세기 북스)을 참조.

한 경제적 준비이다. 급변사태가 집권세력의 붕괴, 나아가 정부의 붕괴로 연결되며 가장 먼저 일어날 사태가 ‘화폐의 공신력’의 추락이다. 그래서 식량과 상품의 사재기/숨기기가 급증할 것이고, 경찰과 군인의 일부가 식량을 약탈하는 폭도로 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면 통일과정에 발생할 최초의 문제는 식량과 기초의료품 등을 얼마나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배분할 것인가? 동시에 급증할지 모르는 폭도들로 부터 일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이미 배분한 식량도 포함하여-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지방의 오지까지 식량을 신속하게 수송하고, 사회질서를 빠르게 안정화-질서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인도적 재난의 발생과 대량난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인가? 등이 급변사태 초기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 다음은 [단기 경제안정화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추락한 화폐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장마당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인가? 단기적으로 필수적 재화(기초의약품, 기본소비재 등)의 배급체제-이미 망가진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공급부족으로 인한 각종 필수재의 가격폭등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파괴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시킬 것인가?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생산을 어떻게-어느 수준까지-정상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생필품의 공급애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부족분은 남한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3) 그 다음은 [체제이행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오래된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돌리는 체제이행의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중앙계획과 지시경제를 줄여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허용해 나가야 한다. 사유재산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사유화하면서 소기업 식당 소규모자영업 등의 ‘소규모 사유화(privatization)’도 추진해야 한다. 가격의 단계적 자유화도 추진하여야 하고 상업금융제도도 도입하기 시작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기업과 기업가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시장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시장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제도들이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 시장적 법제도의 도입과 안착이 중요하고, 동시에 혁신적 기업가정신, 성실한 근로의욕, 정직한 상도덕을 가진 새로운 경제주체들도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체제이행의 초기단계이지만 좀 더 진전되면 국유대기업들의 ‘대규모 사유화’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국유대기업을 효율적인 사유대기업으로 바꾸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제도도 도입해야 하고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등도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시작될 때 환율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재정개혁도 중요하다. 사회주의의 과도한 복지제도-실제는 작동하지 않지만-를 축소하고 합리화하여야 한다. 조세제도의 도입도 정부기능의 재조정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육성과 자유노동계약제의 도입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즉 체제 이행 시에 풀어야 문제는 대단히 많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냉전이 끝난 후 구(舊)사회주의권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겪은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다. 이들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경제(transition economy)에 대한 개혁청사진’을 통일경제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다음은 [북한경제 발전전략]이 나와야 한다. 현재 북한의 저개발상황-양질의 노동력, 저임금, 막대한 천연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압축고도성장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성장전략이 나와야 한다. 지금의 저개발상황이 북한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과 양질의 인적자원이라는 비교우위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의 진입에 성공적 하도록 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서 수출과 성장 그리고 고용이 선순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이 가능한 ‘자생적’ 개혁개방의 길-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가도록 하고 그 성과가 상당 수준에 이르게 한 후, 본격적인 남한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의 자본이 개혁초기에 일거에 올라가 북한의 토지와 자원을 난개발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려놓고, 물가를 올리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남한이 과거 60-70년대 산업화-노동집약적 수출성장전략-시대에 축적한 경험 기술 자본 등을 북한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자생적 노력을 대체하지 말고 지원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음은 [남북경제 통합전략]이 나와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 국토공간 전체를 어떻게 재구상하고 재기획할 것인가? 산업단지는, 관광지는, 고속도로는, 항만과 공항은? 그리고 7500만이 넘는 통일인구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가? 훈련 후 고용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구조는 남과 북간에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상호보완적으로 만들려면? 금융시장의 통합은? 재정 통합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통합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각종 법과 제도의 통합은? 어떻게 하여 각종 법과 제도의 통합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통합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과제가 통일경제학이 답해야 할 과제들이다. 위에서 든 것은 극히 일부에시에 불과하다. 실제로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경제문제와 경제사회 정책문제가 등장한다. 이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경제학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통일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가 한국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제학과 중국의 경제학이 우리 통일을 고민하여 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학이 앞장서 통일에 답해야 한다. 통일의 철학과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학에서는 통일이 빠져 있었다. 통일경제학은 일부 학자들의 관심의 영역에 불과하였다. 모든 경제정책연구에는 통일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경제정책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재정, 금융, 무역, 산업, 교육, 노동, 국토개발, 복지 환경 등등 모든 경제학의 연구 분야에 통일이 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통일과 금융, 통일과 교육, 통일과 산업, 통일과 국

토개발, 통일과 복지 등등이 한국경제학의 주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다. 솔직히 너무 늦은 감이 많다.

(2)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학이 나와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의 발전과 도약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니 반드시 동아시아의 신시대-번영과 평화-를 여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담은 그리고 그 전략을 담은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학’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이 나와야 이웃 4강이-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한반도 통일에 보다 호의적 내지 수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학은 반드시 한반도 통일이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경제공동체로 시작하여 뒤에는 사회문화공동체 더 나아가 안보협력체 등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이웃 4강에게 큰 이익이 됨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누구나 현상변화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주변 국가들도 불안이 있다. 이 점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되어야 신동아시아 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어, 만주, 연해주, 극동에도 새로운 도약과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 통일을 지지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²⁴⁾

다른 하나는 통일한반도가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고구려가 망한 후 1200여 년 간 중국의 변방으로 살아 왔다. 1894년 청일전쟁이후 비로소 중국의 변방에서 벗어났다. 그 이후 36년간 일본의 변방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남은 미국의 변방, 북은 소련의 변방이었다. 통일한반도가 새로운 번영과 평화의 동아시아를 열어 나갈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 통일한반도는 동아시아/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다.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 그리고 21세기는 분명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시아의 어디가 세계의 중심이 될까?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이 될까? 분명 동아시아/동북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21세기 신 동아시아/동북아 시대의 개막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동북아시대의 필수조건이다.

사실 동아시아/동북아의 발전 잠재력은 대단하다. 인적 물적 자원도 많고 잠재적 시장도 크데 그 동안 동아시아/동북아가 발전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바로 非정상국가인 북한체제의 존재 때

24) 역으로 한반도 분단이 오히려 이웃4강들에게 재앙이 됨을 함께 설득하여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등으로 한반도가 다시 분단이 되면, 북한에는 중국의 변방속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동해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설치될 것이고, 동해에 중국군함이 등장하면 일본은 당연히 재무장할 것이다. 아니 핵보유까지 할 지 모른다. 그러면 동북아는 빠르게 신 냉전 시대로, 새로운 갈등과 대결의 시대로 들어간다. 동북아에 번영과 평화는 물 건너간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길이 한반도의 재 분단 내지 분단의 고착화이다. 이웃 4강의 지지와 협력-우리의 통일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하여 한반도 분단은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문이다. 북한이 동아시아/동북아의 중심에 앉아 물류를 막고 있고, 이 지역 전체를 안보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과정에서 북한체제가 정상화되어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되면 동아시아/동북아는 진정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한반도는 동아시아/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고, 중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번영과 평화의 동아시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한국경제학은 신 동아시아/동북아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학’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21세기 초 한국경제학이 풀어야 할 과제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하여야 할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근대화-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세계화-선진화시대의 발전패러다임’을 연구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화-선진화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그리고 개조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60-70년대의 산업화체제와 80-90년대의 민주화체제를 넘어서는 국가시스템 개혁 즉 국가개조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과정에 대한 구체적 단계별 통일전략-통일경제학-을 연구제시하고, 더 나아가 통일 후 전개될 동아시아시대의 발전청사진과 전략-동아시아공동체경제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이러한 3가지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하여 한국경제학은 어떠한 방법론-연구방법론-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3. 어떠한 방법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국경제학이 선택할 연구방법론은 무엇이어야 할까?

1) 신(新)고전파적 경제분석은 기본

기본적으로 [신(新)고전파적 경제분석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이 정치성(精緻性)과 논리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다루는 계량경제학의 기법도 탁월하다. 그런데 신고전파적 이론과 기법을 배운 이후에는 연구의 대상을 신고전파적 시장경제에 머물지 말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헌법경제학(constitutional economics) 그리고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 등등으로 한국경제학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래서 점점 아담스미스 시대가 지향하였던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의 방향으로 학문적

관심과 연구영역 그리고 연구방법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심리, 법, 제도, 정치, 윤리, 종교 등과 경제현상 간의 상호관계 내지 상호작용에 대한 좀 더 구조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이웃영역으로 확대하여 가면 물론 미시적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모델을 설정한다던가,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정밀 분석은 어려울지 모른다. 정량(定量)분석은 줄어들고 정성(定性)분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결과는 ‘현실 적 합성’과 타당성은 크게 올라 갈 것이다. 환언하면 연구의 rigor는 약해지지만 연구의 relevance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의 흐름이고 변화이다. 이 하나의 움직임을 학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등등의 현상으로, 자의적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이다. 따라서 경제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등등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만들어 낸 ‘사고의 산물’이다. 인간의 생각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實在)가 아니다. 주관적 허구이지 객관적인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바꾸려면 반드시 초(超)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재에 좀 더 접근하게 된다.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국가발전비전이 나오고, 국가개조-법과 제도 개혁 그리고 의식과 도덕의 개혁-의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

2) 역사와 현장과 제도의 중시

이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반드시 [역사와 현장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이론이란 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수단(simplifying device)에 불과하다.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현실이 사상(捨象)되기 때문에 이론은 그 만큼 현실에서 멀어진다. 이론에 과몰입 현상에서 멀어지다 보면, 학문이 허학(虛學)내지 공학(空學)이 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 세상의 큰 움직임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는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를 하여야 한다.

첫째는 ‘현장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실제의 학문, 실사구시의 학문이 될 수 있다. 20세기 초 일본의 한 동경대학교수가 시골에서 올라온 도시빈민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수직을 버리고 평생 판자촌에서 빈민통계를 만들며 살았던 예가 있다. 그래서 이농(離農)한 노동력이 도시경기가 나빠져도 다시 시골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의 잡업(雜業)층(informal sector)에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금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다. 올바른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현실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 경제학은 이러한 현장연구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한국경제학에서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는 한국경제학연구에서 특히 개별산업연구, 개별기업연구, 직종연구, 지역경제 연구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으로도 나타난다. 서구에서 발전한

최신의 경제이론-수입경제학-을 알리는 데 급급하고, 그 이론이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의미와 가치를 실제로 가지는지, 산업과 직종 그리고 지역경제로 내려가 조사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분석 방법의 정치(精緻)성-모델 설정과 계량적 기법-에서는 경제학이 경영학이나 행정학 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현장연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경영학이나 행정학이 경제학보다 훨씬 앞서는 것 같다. 새로운 경영학이론이나 행정학이론은 현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영학에서는 실제로 여러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경영기법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비교분석하면서 이론화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행정학이론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행정개혁의 사례를 모아, 그 속에서 보편원리를 찾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학은 책상위에서 시작하여 책상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역사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사(經濟政策史)연구와 경제사(經濟史)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 유사한 정책노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없으면-특히 지난 정책의 성공과 실패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가 잘못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려면 현장성과 더불어 반드시 역사이해가 함께 해야 한다. 본래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현상도 소위 path dependent 하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잘못된 현상도 나름의 합리성과 이유를 가진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를 올바르게 계획할 수 없다.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정책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을 찾아, 그 분들이 현장정책경험을 통해 쌓아온 암묵적 지식(implicit knowledge)-정책경험, 지혜, 감(感) 등-을 많이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연구’가 중요하다. 이미 앞에서 법경제학이나 제도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사실 시장이란 것이 허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문화-물론 문화도 제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속에서 존재하고 작동한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1990년 대 워싱턴 컨센서스가 개도국의 바람직한 개발전략으로 제시되어왔는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개도국의 제도와 문화와 선진국과의 제도와 문화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그래서 시장의 작동행태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선진국에서 형성된 정책판단기준을 제도와 문화를 달리하는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강요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이 주장하는 개발전략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다(One Economics, Many Recipes)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다.

역사와 현장과 제도의 차이를 외면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비(非)생산적 논쟁의 하나가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다. 한쪽은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비중이 가능한 높아져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를 전자는 ‘시장만능주의자’라고 그리고 후자는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몰아세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역사와 현장과 제도를 중시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비생산적 낭비적 논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를 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어느 나라든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중·후기가 되면서 시장을 둘러싼 ‘제도의 근대화’-예컨대 재산권제도, 계약법제, 시장경쟁법제 등의 도입과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대 된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때도 정부개입이 줄어들지 않으면 정부실패의 비효율이 너무 커진다.

또한 현장을 보면,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시장실패도 있겠지만 경제규모가 크면 정부개입이 가져오는 정부실패가 더 크고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정부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²⁵⁾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한 역사 속에서 특정한 나라를 놓고 이야기하면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내지 비중에 대한 정답은 자연히 나오게 된다. 그러나 역사와 현장과 제도 발전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나 정부이나의 추상적 이론적 논쟁만을 하면 양쪽의 주장은 평행선만을 그리지 아무런 생산적 결론을 내 줄 수 없다. 그 만큼 역사와 현장과 제도는 중요한 것이다.

3) 전문화(세분화)와 종합화(전체화)(wholistic)의 변증법

연구방법론으로서는 전문화(세분화)와 종합화(전체화)의 변증법적 발전이 필요하다. 젊은 한국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하나가 얼마나 자신의 연구분야, 연구방식을 전문화 내지 특화하여 나갈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는-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전문화를 높이 평가한다. 전문화와 특화를 해야 학문전체의 생산성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첨단화된 분야에 특화하고 전문화할수록, 그리고 첨단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작은 문제를 심층적으로 풀면 풀수록, 높은 학문적 성취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지식인, 경제학자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고민이 있다.

전문화하고 특화하면 할수록 자국(國)이 당면한 현실의 경제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국에는 최첨단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미시적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계적 학문분야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현재 당면한 중요문제일지 몰라도, 자기가 사는 조국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오히려 자국의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기존의 자기가 하는 경제학 분야에 대한 천착보다는 정치경제학이나 경제행정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

25) 그래서 사회주의는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 성공하기 쉬운 법이다. 이스라엘의 키브츠 같은 작은 규모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같은 논리를 역으로 하면 현재 중국과 같은 거대규모의 경제가 과연 언제까지 사회주의적 정부주도의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 그 귀추가 흥미롭다.

기가 전공하는 경제학의 일 분야-예컨대 금융경제학-보다는, 같은 경제학에도 다른 분야-예컨대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자국의 경제문제-금융의 문제를 포함하여-를 푸는 데 더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 많은 젊은 경제학자들이 고민한다. 자기의 연구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화하고 전체화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필자가 1970년 전반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스미야 미끼오선생)께 문의한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학문은 긴 여정이다. 학문은 우선 세분화 전문화-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반드시 종합화 전체화-전체를 보는 노력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종합화(전체화)가 진행된 다음에는-즉 전체를 본 다음에는-반드시 다시 전문화(세분화)의 노력으로-즉 다시 부분으로-돌아가야 한다.” 결국 변증법적 발전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창조적 사고는 많은 경우 ‘변방’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주류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무슨 이야기인가? 경제학에서의 창조적 사고는 경제학(의 주류)에서 나오기보다-신고전과 경제학에만 침잠하다가 나오기 보다는-경제학자가 정치학 혹은 심리학 등을 공부하면서-두 학문이 overlap 되는 학문의 변방에서-나오기 쉽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중성자(中性子) 장(場)을 발견하여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학자는 자신의 발견내지 발상이 사실을 고등학교 때 배운 철학서(니시다 철학: 西田幾多郎의 철학)에서 왔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금융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새로운 발상을 행동경제학에서 얻을 수 있고 환경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종교학에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이론(science)과 정책(art)의 결합

연구방법론으로 이론이라는 과학(science)의 측면 만 아니라 반드시 정책론(정책과정론) 내지 개혁관리론이라는 ‘술(術)과 법’(art)의 측면을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결과가 실사구시의 실학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하나는 지금까지의 ‘정책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 정책을 담당했던 정책책임자들의 ‘묵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을 전수받아야 한다. 정책집행의 know how를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여야 그 연구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공(實功)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은 특히 발전도상국의 정책은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많다. 특히 최근에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구조조정을 상시화(常時化)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잘 하는가? 가 그 나라가 성공국가가 되는가? 아닌가? 를 결정한다. 사실 오늘날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를 발전시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몰라서 경제가 어려운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지 못하여 경제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훌륭한 경제학자라면 이론적으로 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기여가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그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전략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경제학이 ‘도덕철학’을 넘어 ‘국가전략학-경제안민학’으로 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전략학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풀어 갈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민주화된 시장경제하에서 구조개혁(구조조정 포함)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이론경쟁’ ‘사상투쟁’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이론경쟁과 사상투쟁에서 이겨야-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선비적 학자’들이 공론(公論)을 바로 세워야-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화-선진화를 위한 국가개조 즉 총체적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이론경쟁과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한다. 구조개혁의 반대하는 그룹은 반드시 반대의 이론과 사상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기려면 총체적이고 전체적 주장-개별적이 아니라-을 하여야 한다.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합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당위임을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주장하려면 교육학적 관점에서 혹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한하여 이론투쟁을 하면 부족하다. 국가발전 전체에 대한 구조개혁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정치발전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까지, 지금 논의하는 대학개혁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가지고 이론과 사상투쟁을 하여 이겨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조개혁은 많은 경우 ‘기득권 내지 특권그룹’과의 싸움이 된다. 그래서 기존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기득권 내지 특권그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때로는 제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개혁전략’이 필요하다. 홍보와 사상투쟁이 필요하고 timing이 중요하고 개혁의 sequencing(어떤 개혁부터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개혁을 성공시켜 그 다음 개혁의 우군(友軍)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큰 개혁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 지역부터 개혁하고 그 성과를 보고 이웃이 따라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위 two track 방식은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개혁전략이다. 요약하면 [이론 --> 정책 --> 전략]이다. 즉 이론은 반드시 정책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정책은 반드시 전략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론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이론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5) 학제적 공동연구의 필요

다른 학문분야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많이 하여야 한다. 한국경제학은 한국정치학 한국법학 한국사회학 한국행정학 등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 아니 서로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학이 국가전략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전략도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경제학(經世學)으로, 안민학(安民學)으로의 한국경제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학이 훌륭한 완성된 경제학이 되려면 자기 부정을 하여야 한다. 즉 탈(脫)경제학을 할 때 진정한 경제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대인(大人)이 되려면 소아(小我)를 벗어나야 하듯이, 알을 깨는 아픔을 참고, 지금의 기존의 경제학의 안목과 틀을 벗어나야 좀 더 큰 경제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연구가 성공하려면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 꼬끼리 쫓지를 만지면서 꼬끼리를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 하나는 선청(善聽)해야 한다.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러도 다른 하나는 지고(志高) 즉 뜻을 높게 가져야 한다. 보통 뜻이 높지 않으면 작은 동산에 올라 만족하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뜻이 높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욱 더 노력한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진다. 소위 일일신신(日日新新)해진다. 필자는 한국경제학의 연구 자세와 방법이 이렇게 되기를-선청하고 지고하기를 그래서 일일신신하기를-기대한다.

4. 어떠한 자세로 연구해야 하는가?-'선비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²⁶⁾

지금까지 앞에서 한국경제학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떠한 방법론으로 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학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과제를 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경제학을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결국 학자란 무엇인가? 아니 학자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1) 학자의 두 종류: 서생(書生)과 선비

학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서생(書生)이고 다른 하나는 선비이다. 경제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서생이란 한 마디로 공부를 한 후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을 하는 분들이다. 기본적으로 생계형 학자이다. 서생이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이미 표준화된 지식(standardized knowledge)이다.²⁷⁾ 이미 다 정리되고 표준화된 지식-교과서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사는 분들이다. 요즈음 식으로 표현하면 '직업으로서의 학자'이다. 물론 이분들도 오늘과 같이 분업화된 사회에서 표준화된 지식의 전달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

26) 선비란 순수한 우리말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선비는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선비는 '단군'이다(홍만종; 해동이적(1666)). 선비는 옛날에는 선인(仙人)이라고도 불렸다. 선비사상은 고조선 이후 무교(巫敎), 신교(神敎), 선교(仙敎) 또는 풍류도(風流道)로 불리어 왔다. 선비는 고구려 때는 조의(尉伊)선인으로 신라 때는 화랑(花郎)으로 그리고 고려 때는 향도(香徒)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비사상이 조선조에 들어와 성리학과 융합하면서-조선조는 성리학이 국교임으로-선비사상은 조선시대 유학자 내지 사대부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비하면 조선조 시대의 유학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뿌리가 매우 깊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기원과 같이 한다. 그 시대의 정신적 도덕적 정치적 지도자이다.

27) 표준화된 지식은 '교과서화' 할 수 있는 지식이다. 형식지(explicit knowledge)라고도 한다. 앞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암묵지(implicit knowledge)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암묵지-예컨대 정책추진자의 경험, 기능인의 know how와 감(感) 등등-는 아직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형태의 지식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사실은 암묵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분들은 선비는 아니다. 옛날식으로 이야기 하면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소학을 가르치는 훈장선생님들이 이에 속할지 모른다. 요즘으로 하면 서구에서 배운 경제학 책을 가지고 와서, 배운 그대로 표준화 된 교과서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교수들이 이에 속할지 모른다.

그러면 ‘선비’란 무엇인가?²⁸⁾ 물론 선비가 서생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비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목표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나는 수기(修己)이고 다른 하나는 치인(治人)이다. 수기란 사심(私心)을 없애는 것이다. 욕심을 누르고-자기절제를 하면서- 양심(良心)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자세와 항상(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할 수 있는 담당한 부동(不動)의 마음을 가져야 선비이다.²⁹⁾ 한 마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공부’를 하고 비록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도-가난해도-자세가 편안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선비이다.

우선 이런 정도의 마음의 수양이 전제되어야 선비이다. 아무나 선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에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을 존중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실은 학자들이 모두 선비임을 전제하고 내지는 기대하고 형성되어 온 전통이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한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수양이 된 다음에 선비는 치인(治人)의 학문, 즉 경제안민(經世安民)의 학문을 하는 분들이다. 환언하면 나라발전의 방략, 국태민안의 방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즉 국가전략학 내지 국가경영학으로서의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사서삼경(四書三經)도 읽지만 천문, 풍수, 군사, 의술, 농사, 지리, 등도 모두 공부하여 던 것이다. 끝임 없이 자기수양을 하면서, 즉 도덕(道德)능력을 높이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학(實學)을-경제(經世)능력을 위하여-하는 학자들이 선비이다.

그러면 평상시의 선비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기수양을 하고 국태민안의 방략을 연구하는 선비가 평상시에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더 있다.

하나는 후학(後學)을 가르치는 일이다. ‘차세대 선비’를 길러내는 일이다. 선비의 중요역할의 하

28) 여기서의 선비는 우리나라의 전래의 선비사상-고조선 때부터 형성되어 온 선비사상-이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 성리학과 결합된 이후 형성된 ‘선비관(觀)’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한다. 한마디로 성리학적 선비이다. 조선조의 선비사상은 크게 보아 한 마디로 선공(先公)주의 내지 공익(公益)주의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청렴(淸廉)이고 다른 하나는 민본(民本)이다. 청렴은 자기억제 즉 사심과 욕심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고, 민본은 인간사랑 백성사랑 국민사랑이다. 선비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덕을 가져야 선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선조 시대의 선비사상이고 조선조의 최고의 선비는 세종대왕이고 이순신이고 정도전이고 이율곡이고 정약용이라고 생각한다.

29) ‘양심’이란 말은 맹자의 말이다.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면 나타나는 본연의 마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갖추어진 마음을 이야기한다. 맹자는 백성들은 항상(恒産)-일정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면 항심(恒心)-평상심과 양심-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백성에게는 생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선비는 항상(恒産)이 없어도 항심할 수 있는 사람(無恒産而有恒心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차세대 서생’을 양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선비’를 몇 사람이라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회에 ‘지적-도덕적 지도자’와 ‘지적-도덕적 리더십’이 생기고, 그 리더십이 유지 계승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다. 이것은 선비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즉 그 사회 그 시대의 ‘公論(public judgement)’을 세우는 일이다. 공론이란 여론(輿論: public opinion)이나 중론(衆論: majority opinion)과는 크게 다른 개념이다. 여론이나 중론은 다수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앞서는 견해이다. 또한 심사숙고한 이성적 의견이라기보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유동적이고 쉽게 변화한다.

그러나 공론은 다음의 두 가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첫째는 ‘천하의 이익’ 즉 ‘백성의 이익’을 위한 의견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특정집단 혹은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견해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한 견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연구와 분석을 하면서 심사숙고한 견해이다. 감성적-정서적이라기보다는 지성적-이성적 견해이다. 이상의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공론이 되고, 그래서 공론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정론(正論)이 된다. 올바른 견해가 된다. 따라서 공론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심이 없는 최고의 전문가인 선비-선비학자-들만이 세울 수 있는 견해이다.

사회에는 공론도 아니고 여론이나 중론도 아닌 또 하나의 견해가 있다. 그것을 옛날에는 ‘부유(浮遊)’라고 했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소위 뜬소문이다. 수년 전 광우병 소동 때의 떠돌던 헛소문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요즘에도 인터넷에 이러한 부유가 적지 않게 떠돌아다닌다. 옛날부터 이 부유가 시중에 난무하면 세상이 어지럽고, 부유가 조정에게까지 들어가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비가 공론을 바르게 세워 이 부유가 무성해지는 것을 막고, 그 진위(眞僞)를 가리고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론 또는 중론이 그 때 그 때 이해집단들 간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또 감성적 정서적 판단으로- 유동할 때, 백성전체의 이해관계에-요즘으로 말하면 국익의 입장에-서서 정(正)과 사(邪)를, 즉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주는 것이 공론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윽고 선생께서는 선비와 선비들이 세우는 공론이 그 ‘나라의 원기(元氣)’라고 하였다. 사람도 원기가 강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듯이, 나라도 원기-선비와 공론-가 강해야 바로 서고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서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선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백면서생(白面書生)의 길을 가고 있는가? 경국지재(經國之才)의 길을 가고 있는가?³⁰⁾

30) 특히 경제학자들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즉 경제학은 모든 인간이 소아적 합리성(이기심: self-interest)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분석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내가-경제학자가-소아적 합리성(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선비로서의 경제학자’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소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된다. 수기치인이라는 대아적(大我的) 합리성(공공심: public interest/ value)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분석할 틀을 가지고, 자기

요즈음 대학은 ‘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고, 백면서생의 길을 가면서, 적당히 사회적 부러움과 존경을 받으며, 실제로 유한계급화(有閑階級化)하는 경향은 없는가? 우리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조선조 500년은 사실 선비정신이 크게 성하던 시대이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조선조가 망하였다고-이 세상에 망하지 않은 왕조는 없는데- 우리는 선비정신까지 폄하하면서-서구문물만을 최고라고 앞세워- 우리 전통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 모두를 외면하고 무시하여 왔다. 과연 잘한 일인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물론 앞선 나라를 배우고 모방하는 것은 발전과 진보의 기본이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있는 훌륭한 정신, 문화,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대립갈등의 상당부분은 사실은 우리사회의 ‘지성과 가치의 혼란’ 즉 ‘사상의 위기’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상의 혼란과 위기의 기저에는 ‘지성적-가치적 리더십’의 약화, 즉 ‘선비정신의 실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서구적 표현을 빌리면 우리사회에서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s)’의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2) 학자의 현실참여의 문제-출사(出仕)의 문제

학자가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사회적 공론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부에 들어가 관직을 맡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소위 출사(出仕) 혹은 출처(出處)의 문제이다. 요즈음의 표현으로는 polifessor의 문제이다.

이 학자의 현실참여의 문제-친(親)정부가든 반(反)정부가든-는 본래 선비의 세계에서 보면 당연히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이다. 즉 선비는 당연히 출사하여야 한다. 아니 출사하기 위하여, 환언하면 치국(治國)하고 안민(安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기(修己)하며 경세적(經世的) 학문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professor, 즉 가르치는 것은 기본조건이고, polifessor, 즉 현실참여가 선비의 목표 이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비의 출사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문제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갈 것인가? 소위 진퇴(進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3가지 견해가 있었다. (1) 도(道)가 행하여지면 나가고, 난세(亂世)가 되면 물러선다는 입장이다. 지도자-정부-가 옳은 경우 나가서 돕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선다는 것이다. 중국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남명(南冥) 조식선생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³¹⁾ (2) 난세(亂世)에도 나아가고 치세(治世)에도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부도덕한 임금을 섬기는

행동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31) 남명 조식선생은 성리대전에 있는 “나아가 벼슬을 하면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크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물러나 은거하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나가야 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물러나되 반드시 물러난 후 ‘시대의 사표’로서 인격수양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출사하지 아니했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낮은 직책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윤(伊尹)과 유하혜(柳下惠)가 이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율곡(栗谷) 이이 선생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율곡 선생의 애민정신은 참으로 각별하였다. (3) 때에 맞으면 나아가고 때에 맞지 않으면 물러선다는 입장이다. 즉 시대의 상황을 읽을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본 다음, 속히 나갈 때는 속히 나가고, 머무를 때는 머물고, 물서 설 때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孔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퇴계(退溪) 이황선생이 이에 속한다고 보면 어떨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견해가 옳을까? 오히려 이것이 선비의 출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다. 선비의 출사 그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선비의 세계였다.

필자는 위의 3가지 경우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품성에 따라 또 선호에 따라 출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나라와 백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절에 현실참여를 할 것인가-예컨대 독재정권이나 민주정권이나- 보다 더 중요한 출사의 조건은 그 학자가 선공후사와 수기치인의 선비정신을 가지고 출사하는가? 아닌가? 이다. 선비정신을 가진 학자의 출사라면 그 출사의 시기, 형식, 지위 등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나라와 백성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선조시대에는 polifessor(현실참여 학자)가 명예이고 보람이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것 같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의 출사에는 ‘선비의 출사’는 적고 ‘서생의 출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생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학문을 한 학자이고 생계를 위하여 학문을 한 학자이다. 그래서 출사를 하여도 개인적 출세를 위하여-돈과 권력을 위하여-하는 것이지, 선공후사하는 마음으로, 국태민안의 경세(經世)를 위해 출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생이 출사를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의 변화-개혁과 개조-를 선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사전의 주장과 출사후의 주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출사 전에는 기득권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다가도, 출사 후에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식이 된다는 것이다.

‘선비의 출사’는 그러하지 않다. 자신이 오랜 기간 연구한 국태민안의 전략과 경세안민의 방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출사하는 것임으로,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선비의 경우에는 출사하면 곧바로 ‘변화와 개혁’을-비록 위험부담이 있어도-추진한다. 그리고 출사전의 주장과 출사 후의 주장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런데 ‘서생의 출사’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지 않다. 선비의 출사는 적고 서생의 출사가 많아서 그래서 본래 polifessor가 학자의 명예여야 하는데 우리사회에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일이 두부 자르듯이 둘로 명쾌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 속에는 ‘半서생-半선비’의 학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학이 올바로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연구과제도 중요하고 연구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의 정신적 자세, 가치관과 인

생관과 처세관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걱정스러운 것은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 ‘서생적 학자’는 많아지는데 ‘선비적 학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통일과 선진화-는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과제인데 이 과제를 풀어야 할 인재들이 허약해진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역사는 분명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가치관에서 그리고 그 것을 몸으로 대변하는 ‘새로운 지식인 집단’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사회에서 ‘선비정신의 부활’ ‘선비적 가치관의 재생’이 더욱 더 간절히 요망되는 것이다. ‘임금은 천하(天下)를 영토를 삼지만 선비는 만고(萬古)를 영토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 한국경제학자 중에서도 긴 역사적 안목에서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선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3) 율곡의 한탄-경장(更張)세력의 부족

선비의 출사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조 시대 율곡선생이 장탄식을 한 적이 있다. 필자는 지금도 그 한탄이 유효하다-이 시대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조선이라는 집은 지붕이 부서지고 기둥이 낡아서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폐가(廢家)와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데 구조개혁을 할 능력을 가진 인재가 없다는 한탄이었다. 조선에는 창업(創業)을 잘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수성(守成)을 잘 하는 관료들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경장(更張)이 필요한 때이다. 환언하면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개혁을 담당할 경장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한탄이었다. 이것은 선비의 길을 가는 학자들의 경세능력과 개혁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한탄이다. 출사는 좋으나 반드시 개혁준비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³²⁾

경장세력이 되려면 물론 우선 사심이 없어야 한다. 사심이 있으면 백성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 자기 자신이 기득권과 연계되어 있으면 경장이 어렵다. 그래서 멸사봉공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장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능력’이다. 개혁능력은 이론과 실무의 종합에서 나온다.

32) 조선조의 성리학적 선비사상을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기(修己)를 통하여 지도자의 도덕성을 높이면 치인(治人)이 저절로 된다는 견해와 도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도자의 경세성(經世性)-개혁능력 등-을 높여야 치인을 할 수 있다. 즉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두 가지 견해도 나뉜다. 사상사적으로는 전자는 맹자(孟子)와 장자(莊子)를 중시하는 견해이고, 후자는 순자(荀子)와 관자(管子)를-더 나아가서는 손자(孫子)나 한비자(韓非子)를- 중시하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비의 도덕성뿐 아니라 선비의 경세성을 강조한 인물은 조선 초기에는 정도전, 중기에는 이율곡,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이었다. 도덕성뿐 아니라 경세성을 중시하면 자연 4서 3경뿐 아니라 한비자 등의 법가, 순자 등의 병가, 그리고 천문, 지리, 의학, 농사, 산술, 항해, 등, 요즈음 식으로 이야기하면 ‘법과 제도’ ‘과학기술’ 등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된다. 생각건대, 조선조의 성리학적 선비사상은 수기라는 지도자의 도덕성강조에는 큰 기여를 하였으나, 치인을 위한 즉 경세를 위한 학문-과학기술, 법과 제도 등등-에 대하여는 소홀히 한 것이 큰 부족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율곡 선생도 당시 선비들이 너무 문약하고 실재를 몰라서, 개혁의 마음은 있으나-선공(先公)과 애민(愛民)은 할 수 있으나-개혁의 법술(法術)이 부족한 것이 너무 한탄스러웠던 것 같다. 대단히 옳은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의 결합에서 나온다. 그런데 선비 중에는 이상에는 밝으나 실무에는 어두운 분들이 적지 않다. science에는 깊으나 art에는 허약한 분들이 많다.³³⁾ 그래서 율곡선생의 한탄이 나온 것이다. 한국의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한국경제학자들이 경제이론에는 밝지만 실제로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기면 얼마나 제대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평소의 연구가 얼마나 실천지향적이고 실사구시적인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정권 초기에는 항상 대학교수들을 중용하다가 정권 중반에 오면 정책성과가 부진하여-때로는 정책실수가 많아- 내 보내고 다시 정통관료를 중용하는 경향으로 돌아간다. 여러 정권에서 이러한 인사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일단 관료들이 다시 돌아오면 구조개혁은 물 건너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관료는 본래가 현실을 잘 관리하는 수성세력이지 현실을 개혁하는 경장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학자들이나 언론들은 별 때처럼 일어나, 이제 권력-청와대-이 관료세력에 둘러싸여 현상유지로 가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 고 목청을 높이며 비판한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이 경장세력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의 학자들이-특히 경제학자들이-크게 분발할 일이다.

5. 맺는 말

지난 산업화-민주화시대 한국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대학교수로 장차관으로 정부연구소의 연구책임자들로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1963년 국민일인당 소득 100불 하던 대한민국을 1995년 1만불로 그리고 지금 2만불을 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한국경제학자들의 공은 진실로 다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선진일류국가로 만들고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한국경제학자들은 한 번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21세기 전반부에 ‘선진통일강국’을 만들어 세계중심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경제학과 한국경제학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선 학문하는 자세, 마음, 가치관부터 다시 살펴보아 단순한 ‘서생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선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公論)을 세우면서-국민의 사상적 혼란을 줄이면서-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국가적 역사적 과제에 좀 더 심층적 연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는 반드시 실천지향적-실사구시적 연구여야 한다. 국가 전략-국가경영적 관점에

33) 삼봉 정도전(鄭道傳)은 선비들의 유약함을 다음과 같이 질타하였다. “저 유자(儒者)라하는 자들은 -세상을 관망하다가 이익이나 가로채로 자기 한 몸이나 보호할 뿐이다.-평상시에는 고답준론을 하며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듯하다가, 만약 일을 맡기면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다” 삼봉집(三峰集) 권8 부록 사실.

서 국가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구체적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로드 맵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역사. 현장. 제도 연구뿐 아니라, 이웃의 사회과학과의 공동연구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 이상과 현실을 함께 천착하는 연구를 많이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경장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현실참여 즉 ‘개혁을 위한 출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학과 한국경제학자가 한 단계 도약하여야, 비로소 한국경제도 한국역사도 한 단계 도약하여, 통일과 선진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한국경제학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학은 한국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자세와 노력이 만들 것이다. 선진일등국가를 만들겠다는 염원으로 연구하면,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일등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꿈꾸며 연구하면 ‘통일경제학’이 나올 것이고 한반도는 분명 가까운 장래 통일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학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어떠한 꿈과 염원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2014년 초 우리 한국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기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학문의 길을 재창조하여야 한다. 하나는 ‘우리는 왜 학문을 하는가? 우리는 왜 경제학을 공부하는가?’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살고 싶은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남겨주고 싶은가?’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 성찰의 기간을 끝내고 많은 한국경제학자들이 ‘개혁적 선비’세력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경장세력’으로 등장하여, 나라를 구하는 출사를 대대적으로 집단적으로 결단할 때, -또한 우리사회가 그러한 결단을 받아 드릴 수 있게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선진통일강국이 될 수 있고 1000여년 만에 우리 한반도는 ‘세계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의 역사’에 우뚝 설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역사에서 오랜 고난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비약과 독립자존의 역사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선비들의 마지막 건곤일척의 결단과 결행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모두 항심(恒心)을 가지고 한없이 당당하고 한없이 과감하게 나아가자!